

특별호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회학 전공.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당함에 맞서 저항해 왔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연구로 승화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 44주년을 맞아 도시하층민이 한 주체로 나섰던 부마항쟁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학생,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권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 그리고 도시하층민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말 그대로 전민항쟁이었다. 이들은 낮시위는 물론이고 밤시위에서도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고 결국 유신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 부마항쟁 44주년에 즈음하여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독립된 범주로서 ‘도시하층민’의 참여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

들어가며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경남일대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부마항쟁은 4월혁명, 5.18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함께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4대 항쟁으로 불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9, 353). 4월혁명이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렸고 5.18항쟁과 6월항쟁이 전두환정권을 무너뜨렸다면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이기에 2019년에는 부마항쟁이 발생했던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1 2019~2023년 동안 5.18항쟁이 100점 만점에 70점 중후반대로 가장 높고 4월혁명과 6월항쟁이 60점대의 인지도를 갖는다면 부마항쟁은 50점대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36~42).

그러나 부마항쟁은 여전히 다른 항쟁들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는 4대항쟁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서 부마항쟁에 대한 인지도는 4대 항쟁 가운데 가장 낮다.¹ 부마항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관심은 부마항쟁의 참여주체로서 도시하층민에 두어져 있다. 부마항쟁은 그 핵심주체를 ‘민중’으로 보는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이은진 2006).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학생을 비롯한 부산, 경남의 민주화운동권의 기여를 강조하는 연구들(김선미 2018; 2022; 배병욱 2023), 무엇보다도 도시하층민의 참여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원 2006; 임미리 2021).

학생, 노동자·민중, 그리고 도시하층민

2 부산지역의 경우 『보고서』에 실린 분류표를 참고했으며 마산지역의 경우 『보고서』에는 따로 분류표가 실려있지 않아 2018년 버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한 임미리(2021, 151)의 표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도시하층민은 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 저임금 불안정 하층 노동자, 도시빈민 등을 가리킨다. 1979년 이들은 학생, 지식인과 함께 부산과 마산의 거리에서 유신철폐를 외쳤다. 이들은 오랫동안 그 존재가 인식되지 못했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조명받기 시작했다. 부마항쟁 44주년을 맞아 도시하층민이 한 주체로 나섰던 부마항쟁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를 성찰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부마항쟁은 학생, 지식인, 재야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권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 도시하층민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말 그대로 전민항쟁이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2022)에 실려 있는 당시 시위 연행자의 직업군과 연령, 학력 등을 살펴보면 부마항쟁에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는지가 좀더 분명해진다. <표1>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것이다.² <표1>을 보면 학생을 비롯하여 회사원, 상업, 농업, 노동, 무직 등 실로 다양하다. 대학생을 제외할 때 학력별로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이 6대 4의 비율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속하는 청년층이 대다수였다(보고서, 2022, 243).

<표 > 부마항쟁 당시 지역별 연행자의 직업별 분포

구분	부산 명(%)	마산 명(%)
학생	397(37.5)	56(11.8)
잡급직	129(12.2)	-
공원	121(11.4)	127(26.7)
무직	115(10.9)	84(17.7)
회사원/은행원	81(7.7)	92(19.4)
재수생	57(5.4)	-
상업	43(4.1)	14(2.9)
노동	42(4.0)	64(13.5)
선원	27(2.6)	-
운전수	17(1.6)	11(2.3)
기타	17(1.6)	18(3.8)
농업	10(0.9)	4(0.8)
공무원	2(0.2)	4(0.8)
민방위대원	-	1(0.2)
계	1058(100.0)	475(100.0)

* 출처: 『보고서』(2022, 242), 임미리(2021, 151) / **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참여자비율 순으로 정리

3 고등학생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황이나 구술 등을 염두에 둘 때 대다수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4 맑스에 따르면, 룬펜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부산물로서 부랑인, 노점상, 걸인, 념마주이 등이 포괄되며 “모든 계급들의 폐물, 쓰레기, 찌꺼기”라고까지 묘사되고 있다(맑스 2004, 339). 맑스에게 이들은 변혁의 주체는커녕 방해자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학생이 단일집단으로 가장 많았고³ ‘재수생’이라는 다소 모호한 집단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43% 가까이 된다. 당시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학생은 구속자 가운데서도 가장 비율이 높았다(54.7%). 그만큼 학생의 희생이 컸음을 보여준다. 부산지역 대학은 유신체제하에서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신대학’이라 불렸는데 부마항쟁을 통해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김선미 2022). 물론 일반시민의 비율은 그보다 더 많았다. 부마항쟁이 결코 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일반시민들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부산민주운동사』(1998; 2021)는 이들을 ‘민중’으로 파악했다. 특히 재발간된 2021년판은 이 관점을 유지하면서 부산지역 연행자 가운데 잡급직, 공원, 회사원, 노동, 선원, 운전수 등을 모두 노동자층으로 분류했다. 그렇게 했을 때 노동자층은 학생보다도 많은 39.4%가 된다. 또한 무직과 기타 역시 ‘노동 빈민’이라는 점에서 모두 ‘민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273-274).

반면 김원(2006)과 임미리(2021)는 이들을 ‘도시하층민’으로 파악했다. 김원에게 도시하층민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주변화·타자화된 집단”을 의미한다(김원 2006, 422). 어떻게 보면 도시하층민과 민중은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 흡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민중은 독재와 자본가에 맞서는 ‘변혁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혹은 조직화될) 노동·농민·빈민 등 기본계급으로 규정되어 왔다(백육인 1988). 반면, 도시하층민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거나 그 외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룬펜 프롤레타리아’에 가깝다.⁴ 권위주의 시기 민주화운동권은 민중과 룬펜 프롤레타리아를 구분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사건과 동일한 시기 발생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민주화운동에 포괄되지 못하고 잊혀졌던 이유도 그것이 ‘부랑인’이라는 룬펜 프롤레타리아, 즉 도시하층민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최종숙 2019, 97).

따라서 민중과 도시하층민의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들어 민중 개념을 ‘변혁을 지향하는 통합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피지배집단들의 묶음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하고 있다(예를 들면, 이용기 2010 참고).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구분되는 집단을 모두 ‘민중’으로 부르게 된다면 각 집단의 차이는 무시되고 특정집단(예를 들면 노동계급)이 특권화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오랜 시간 도시하층민은 민중이라는 범주에 포괄되거나 배제됨으로써 잊혀져왔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독립된 범주로 상정하고 그 비중에 걸맞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원의 도시하층민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도시 노동자, 도시빈민, 실업자, 도시 하층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노동조합이나 조직에 의해 조직된 조직대중이 아닌 개인과 집단” 일반을 가리킨다(김원 2006, 422). 그렇게 되면 학생과 회사원 정도를 제외하고 항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도시하층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부산과 마산은 1970년대 본격화한 중화학공업화의 본거지 동남지역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들이다(『보고서』2022, 105). 그렇기에 1979년 한국자본주의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을 두 도시의 대다수가 롬펜 프롤레타리아였다는 주장이 될 수 있어서 다소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중의 핵심범주에 속할 (조직화된 혹은 조직화될) 노동자집단과 도시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는 저임금의 불안정 하층 노동자 혹은 실업자 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1>의 직업범주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표에 적혀 있는 직업별 분포를 다시 살펴보면, 부산에서 학생 다음으로 많이 연행된 집단은 ‘잡급직’이다. 이 명칭은 그들의 직업분류가 불가능해서 붙여진 명칭일 것임을 고려할 때 모두 도시하층민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70년대 말 회사원과 공원, 선원, 운전수 등을 제외하고 ‘노동’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역시 도시하층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산보다 더 급진적이었던 마산의 경우 무직과 ‘노동’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학생의 수는 적지만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은행원/회사원 수가 많고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참여자 비율이 높다. 이들은 창원공단 등의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부산의 부두항만 노동자나 창원공단 노동자 등 조직화된 노동자의 개인적 참여가 꽤 있었다는 구술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차성환 2008, 37; 이은진 2006, 103).

결국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부산의 경우 28% 내외(잡급직+노동+무직+기타), 마산의 경우 35% 내외(노동+무직+기타)의 도시하층민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비율은 부산에서는 학생보다는 낮지만 민중과 비슷하거나 높고 마산에서는 민중보다는 낮지만 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의 도시하층민이 항쟁에 참여했음이 분명한 것이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항쟁에 참여했을까? 부마항쟁에는 확고한 지도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들이 각 도시에서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선 것은 맞지만 부마항쟁 전체를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구성하지는 못했다. 이점은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만

들어진 시민학생투쟁위원회나 수습위원회, 19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와 비교하면 분명하다(박철규 1999, 190-191). 부산과 마산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권이 형성되고 있었고 학생운동조직도 태동하고 있었다(김선미 2018). 그러나 그 세력이 아직 항쟁의 지도부를 꾸릴 역량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확고한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것은 항쟁의 '공식적'인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게다가 시간에 따라 참여자 구성과 항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마산은 물론이고 부산의 경우도 시위의 시작은 학생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시민의 참여가 확산해졌다. 학생이 주도한 낮시위가 주로 거리시위의 형태였다면 기층민중과 도시하층민이 가세한 밤시위는 훨씬 더 과격한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 이루어졌던 학생운동이나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도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물론 그 괴리감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1974년 울산의 현대조선소에서 발생했던 '폭동'은 고용형태 악화에 분노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경비실과 회사 승용차를 불태우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27). 또한 1978년 11월 7일 경북대 학생들의 가두시위 과정에서는 파출소가 파손되고 경찰차량이 파괴되었으며 1979년 10월 17일 전남대 학생들은 학생운동을 감시하던 학생지도실을 방화하기도 했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03, 764, 841). 학생이나 조직노동자의 시위는 '평화적'이고 도시하층민의 시위는 '폭력적'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거나 부마항쟁은 지도부가 부재했고 시위의 참여자도 양상도 다양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목표가 분명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쟁 참여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쳐졌던 구호는 '유신철폐, 독재타도'다. 낮시위는 물론이고 밤시위에서도 '유신철폐, 독재타도'가 외쳐졌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이 줄곧 추구해 왔던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운동론의 개념을 사용해 보자면 '유신철폐, 독재타도'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의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 항쟁을 관통하는 이 구호야말로 우리가 부마항쟁을 하나의 단일한 항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근거다. 나아가 부마항쟁을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성과이자 정점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홍순권 2011, 9). 그런 의미에서 부마항쟁을 부마'민주'항쟁으로 부르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목표를 단순히 '유신철폐, 독재타도'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숨

5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이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양상과 비교해도 그 차이는 분명하다.

6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발생하여 성장·소멸에 이르는 사회운동 주기 전체를 이끌어 가는 핵심목표/인식틀을 말한다(Snow and Benford 1992, 138~150).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된 이후 민주화운동권의 핵심목표는 '유신철폐'였다. 유신봉괴의 결정적 사건이었던 부마항쟁에서도 이 구호가 외쳐졌다는 것은 곧 부마항쟁이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점이자 종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부마항쟁 정신계승의 의미

겨진 다양한 요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제외할 때 학생, 지식인, 노동자·민중, 도시하층민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 이해관계를 과연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임미리는 시위 참여자들간의 갈등의 상황을 포착하기도 한다(임미리 2021, 158-161). 다만, 그 갈등이 아직은 에피소드 수준이었고 갈등이 폭발하여 공식화된 형태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무엇보다 밤시위의 폭력이 무차별적이지 않았고 나름의 ‘질서’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체로 경찰 등 탄압기구, 행정기관, 어용 언론이 주된 대상이었지만 일부 권력자와 부유층 역시 공격대상이었다(『보고서』 2022, 107). 그것은 공권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는 물론, 경제적 곤궁, 사회적 멸시와 차별 등 기층민중과 도시하층민이 느꼈던 사회적 불만의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부마항쟁이 목표했고 쟁취했던 ‘유신철폐’는 부산과 마산 두 도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을 통해 전 국민이 긴급조치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고 보다 더 민주적인 세상에 대한 열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차성환 2020, 60-61). 그러나 항쟁 이후에도 유신헌법은 사라지지 않았고 유신체제의 상속자인 신군부 역시 건재했다(정근식 2000, 271). 이들은 12.12 쿠데타와 5.17쿠데타를 통해 광주항쟁을 짓밟고 또 다시 독재체제 형성으로 나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부마항쟁의 또 다른 목표였던 ‘독재타도’는 일단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마항쟁을 토대삼아 더 확대된 형태로 이루어진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서 87년 6월항쟁이라는 또 다른 전민항쟁을 통해 성취될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9, 355). 그런 점에서 ‘유신철폐’를 위해 항쟁에 나섰던 두 도시의 희생에 우리는 큰 빛을 졌다.

나아가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일반시민의 상당한 부분이 도시하층민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도시하층민들은 ‘불량배’로 호명되어 1979년 10월 22일부터 무기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보고서』 2022, 437-438). 그렇게 잡혀들어간 도시하층민은 삼청교육대 혹은 형제복지원과 같은 부랑인시설을 전전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부마항쟁 기억과 기념의 자리에 이들 도시하층민의 몫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들은 오랫동안 그 존재가 인식되지 못했고 역사서술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이재승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권위주의 시기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순차적으

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회의 가장 낮은 하층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이 항상 가장 마지막 순서로 미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재승 2013, 141). 다행히도 최근 권위주의 시기 도시하층민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부마항쟁기념사업이야말로 이러한 도시하층민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사건에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부마항쟁기념재단에서 주최한 부마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로 “국가폭력과 국가책임”을 선정하고 그 한 세션에서 부마항쟁과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을 함께 다룬 것은 의미있는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된다.

도시하층민은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도시하층민의 인권문제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 도시하층민과 연대하는 일이야말로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미. 2018.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7. 363-396.
- 김선미. 2022. “부마민주항쟁의 아간시위 양상과 주도세력.”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43-272.
- 김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2). 419-454.
- 맑스, 칼. 2004.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2023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사업 보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역음. 2017(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울산』.
- 박철규. 1999. “5.18민주항쟁과 부마항쟁.”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72-201.
- 배병욱. 2023. “부마민주항쟁의 서막, 1979년 9.17 부산공업전문대학 시위의 진상.” 『기억과전망』 여름호(통권 48호). 259-306.
- 백육인. 1988. “과학적 민중론의 정립을 위하여.” 『역사비평』 3. 119-143.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22.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2021. 『부산민주운동사 1』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 이용기. 2010. “‘새로운 민중사’의 모색과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역사문화연구』 제37집. 407-436.
- 이은진. 2006. “10.18 마산민주항쟁의 참여요인.” 『가라문화』 제20집. 83-112.
- 이재승. 2013. “인권기준으로 본 형제복지원 사건.” 학술단체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학술토론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139-166.
- 임미리. 2021.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 『기억과전망』 여름호(통권 44호). 138-185.
- 정근식. 2020. “부마항쟁과 79-80년 레짐.” 『지역사회학』 2(1). 248-284.
- 차성환. 2008. “부마항쟁과 노동자 정치사회화.” 『21세기정치학회보』 18(3). 23-45.
- 차성환. 2020.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4.19의 길’과 ‘5.16의 길’ 사이에서.” 『항도부산』 제40호. 33-65.
- 최종숙. 2019.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등장: 당사자운동주체 형성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담론201』 22(1). 81-119.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03.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1970년대 사건편』.
-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제27호. 1-46.
- Snowm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ldon D. Morris and Carol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33-155.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강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